

박원순 시장, 맞춤형 2차 조직개편 단행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핵심정책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맞춤형 조직개편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직개편은 지난 8월1일 발표한 1단계 조직개편안에 이어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실현할 내용을 담았다.

1차 조직개편안이 남북협력, 거점 성장, 공공책임보유 등 추진체계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집중됐다면, 이번 2차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핵심정책 실행 뒷받침…내년 1월17일부터 시행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민생노동정책관' 재편 등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안전·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 이 핵심이다.

먼저 지역업체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한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하고, 현재 경제

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격상해 일자리 절벽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또 수요자 맞춤형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주택건축국 내에 신설해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용산건물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건축국 내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신설한다. 텁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도 '도시철도과'로 확대 신설해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행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전면 개편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이 한 달 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팀당관도 '재정균형발전담당과'으로 재편하고,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을 새로 구성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당관을 재편해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둘째·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취임 첫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뒤 살피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삶을 살피는 데 전념하겠다는 시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원순 서울시장,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의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광역행정청(AMB)을 방문해 주요 도시재생 정책을 공유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 명소화 추진

2022년까지 196억 투입

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박물관, 성밖 주차장 소규모 공원 등의 기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딱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96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

추진계획을 보면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체류형 관광거점화 ▲차 없는 산성도시 조성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월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제'를 열고 2020년부터는 6월에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축제를 개최한다.

10월 축제는 산성스토리 트래킹, 군사훈련 및 무예미당, 세계의상·복식·거리 체험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연다.

도는 주민이 성내에 사는 남한산성민의 특징을 살려 남한산성내 산성리 마을주민이 교통과 주차관리, 환경미화, 로컬푸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지원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64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표축제 발굴, 오픈뮤지엄 구현, 야간조명 설치, 전통문화체험관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남한산성은 연간 320여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라며 "남한산성의 가치와 명성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세계유산 문화재 관리와 보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 늘린다

역세권 범위 350m로 넓혀…공급 3만호 이상 증가 기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해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시작되는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건립한다. 가정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달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개정 조례(안)에는 통합 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00㎡에서 2000㎡로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

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인기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만442호), 사업인기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 사업인기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으로 총 2만2220호 규모다.

류현석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